



자동차 수요 변화로 영세 자동차 정비업계 파산 급증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최근 일본의 신차판매가 증가하면서 영세·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의 파산이 크게 증가하였음.

- 테이코쿠데이터뱅크(TDB: 帝国データバンク)¹⁾에 따르면, FY2011 자동차 정비업체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41.8%(78건), 자동차 부품 및 차량용품 도매점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42.9%(60건) 증가하였음.
 - 영세·소규모 사업자의 도산 증가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25.7% 감소한 33억 7,500만 엔을, 자동차 부품 및 차량용품 도매업의 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43.3% 감소한 101억 7,600만 엔을 기록하였음.
- 반면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, 신차중고차 판매점 등의 파산은 감소함.
 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파산 건수는 39건으로 전년대비 9.3% 감소하였으며, 자동차 소매업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15.0% 감소한 142건으로 나타남.

■ 파산 급증의 원인은 정부의 「에코카 보조금」제도와 이로 인한 자동차 수요 변화로 분석됨.

- 에코카 보조금 제도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내수 촉진을 위해 차량 연비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²⁾을 지급하는 제도임.
- 차량 구입 후 5~10년이 경과한 운전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세·소규모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,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동차 수요 변화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영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.

(J-CAST 外, 5/13)

1) 1900년에 창립한 민간조사기관으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무역회사, 제조업체 등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일본 내 83개소의 지점과 약 3,300여 명의 직원을 둔 기업정보서비스 기관임.
2)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제 대책으로 13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서 교체할 경우 25만 엔,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임.